

주말·연휴마다 ‘예매 지옥’…철도기관 통합 전환점 주목

들끓는 KTX 호남선 증편 요구 해법은

경부선 대비 차종·운행 65% 그쳐
대통령 공약 코레일-SR 통합 속도
KTX-1 투입 등 유연한 대책 시급

이용객 대비 운행 횟수 부족 등으로 지역 차별의 상징으로 떠오른 KTX(고속철도) 호남선 증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노선 포화로 이유로 향후 3년 여간 좌석 증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속도가 붙고 있는 철도기관 통합 논의가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고속철도(KTX, SRT) 이용자는 1억 1,100만명에 달했지만 호남선 여객수송실적은 330만명(3%), 호남고속선 360만명(3.3%)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부선 2,690만명(24.4%), 경부 고속선 4,570만명(41.6%)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주요역별 고속철도 편성수(상행·하행 기준)를 보면 동대구역 133대, 부산역 114대, 대전역 155대에 달했지만 익산역 70대, 광주송정역 48대에 그치고 있다.

노선별 차종 및 운행 횟수도 호남·전라선은 141회로 경부선의 65% 수준이며, 총 공급좌석

은 53%에 불과하는 게 철도노조의 분석이다. 이에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호남고속철 증편·증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 2만4,000여명에서 지난해 3만 4,000여명으로 무려 1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노선 증편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특히 주말, 연휴 이용객에게는 불편과 고통이 몹시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오후, 주말과 같은 시간대에 좌석 수가 377석에 불과한 KTX-신천 열차 대신 995석 규모의 KTX-1을 우선 투입하는 등 유연한 운행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호남선 증편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수년째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평택-오송 46.95km 구간의 2복선화 사업이 끝나는 2028년 이후 노선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노선 용량 포화로 인한 노선 증편과 이용률에 따른 운행 배분이 당장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철도기관 통합’을 전면에 꺼내들어 주목도를 높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철도기관 통합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가 등 국민 편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통합 즉시 하루 1만 5,00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김영록 지사, 신안 ‘한반도 평화의 숲’ 제막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신안 하의도에서 열린 신안 ‘한반도 평화의 숲’ 준공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RT와 KTX를 통합해 일률적인 선로 배분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증차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될 수 있고, 운임 차이에 따른 비용 절감, 교통 복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호남고속철 예매 불평의 심각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SR과 코레일 통합 문제에 대해 회의를 시작했다.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야 할 일과 당면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코레일, SR, 철도 전문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고속철도운영사 통합 논

의를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누적적자가 21조원에 달하는 코레일은 중복 비용 해소를 위해 기관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SR은 각사의 사업 효율화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어 통합 논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통합은 앞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판단이 유보됐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21건 선정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

2026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칼라유도선 도색, 청년 이차비용 지원 등 21건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무등홀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91건이 접수돼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5~6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7~8월) 등의 절차를 거쳐 21건의 사업이 총회에 상

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찬반의결 투표를 통해 전체 21건의 사업을 최종 의결했다.

시정참여형 및 청년참여형 제안사업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5,000만원) △광주역 옥거리 칼라유도선 도색(5,000만원) △월산근린공원 휴게쉼터조성(2억원) △청년 이차비용 지원(5억원) 등 21건이다.

이날 총회에서 선정된 제안사업들은 광주시 재정 상황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최종 결과는 광주시 참여예산 누리집과 주민참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필요”

김미경 도의원, 국비 등 주문 “노동권·사회참여 가치 담겨”

전남도가 추진중인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최근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중인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노동권·사회참여·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담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민선 8기 전남도 공약으로 출발해 현재 도내 12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삶의 질 향상과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인 성과를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근산 기자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

전력에 관한 모든 것,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 바람과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풍요롭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에 대한 모든 것은 이곳에서, 한국전력거래소